

교육부 “학원 통한 감염 늘어…14일까지 합동점검

‘3차 등교’ 전 이틀간 수도권 학원밀집지역 ‘특별점검’ 5월 학원 통한 학생 감염 20명…강사·직원도 7명 확진

교육부는 학원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사례가 이어 집에 따라 학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일 온라인으로 실시된 ‘등교 수업 조정 현황’ 브리핑에서 오는 14일까지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학원 등을 상대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3차 등교가 이뤄지는 3일 이전 이틀 동안에는 수도권 학원 밀집지역에 교육부 차관 및 모든 실국장이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학원을 통한 학생 감염은 7명에 그쳤지만 5월 1달 동안만 20명으로 집계됐다. 학원강사·직원 확진사례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월평균 1.5명였지만 5월은 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부득이 학원에 등원할 경우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면서 학원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원을 상대로 ‘운영 자체 행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주와 이용자

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한 바 있다.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각종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원 방역수칙에 따르면 학원 사업주나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공용차량 운전자 마스크 착용과 차량 소독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는 △출입명부 작성 △증상확인 협조와 유증상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교육부는 “해당 시설을 상대로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라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이나 집합금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와 ‘일진일퇴’ 반복…언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 곳곳에서 소규모로 집단 발생하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날뛰기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태원 클럽발 대규모 감염 사태 이후 전과 고리를 끊으려는 방역당국과 코로나19가 ‘일진일퇴’ 싸움을 무한 반복하는 모습이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신규 일일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으로 35명이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감염 사태로 지난 달 28일 79명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20명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3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실제로 이날 신규 확진 사례 중 지역사회 감염은 총 30건인데, 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했다.

한 동안 조용했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다시 들쭉이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주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교회 전파의 특성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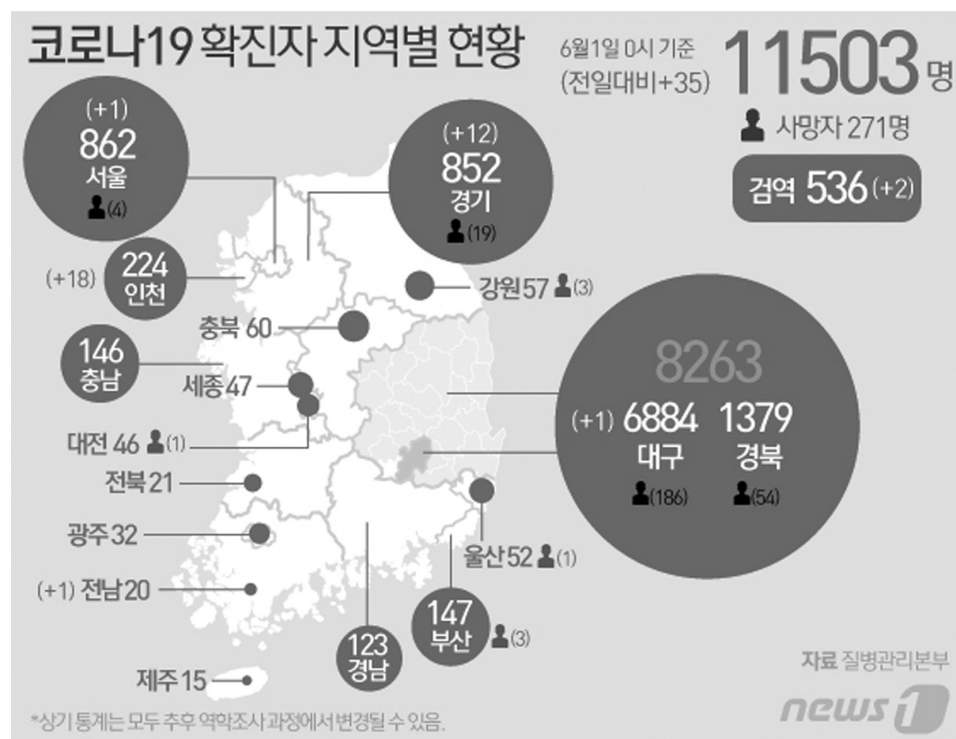
방역 당국은 다시 전파의 중심지가 된 수도권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으나 이미 연쇄 감염이 진행된 상황이라 추가 감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되돌아보면 마치 방역 당국과 코로나19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형국이다.

한쪽을 막으면 어김없이 다른 쪽을 파고드는 코로나19의 습성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같이 전과 고리를 쉽사리 끊지 못하는 이유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옮기는 ‘조용한 전파’는 방역 당국도 좀처럼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날 기준으로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7.7%까지 치솟았다. 앞서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점조직 형태 감염에 쉽지 않은 전과 고리 끊기 전문가들, 항체·항원검사로 장기적 플랜 짜야

전환하면서 불분명 사례 기준으로 5%로 정했다.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일일 확진 환자가 28.9명,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7.4%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방역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사회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고 감염을 근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장소를 차단하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

후 조치에 불과한 만큼 항원·항체 검사 등을 서둘러 실시해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사회 감염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항원 항체 검사를 도입해서 지역사회 감염 규모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스크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도 항체 항원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응 속도는 여전히 답답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항체검사를 위해 혈액 샘플을 모으는 중이라며서도 진단시약 평가 등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 참여 베스트정책 17건 선정

‘코로나 이후 고용개선’ 등

행정안전부가 올해 정부정책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어하는 정책 17건을 뽑아 공개했다.

행안부는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하고, 2차로 국민·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7건을 확정해 1일 공개했다. 심사는 국민참여플랫폼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 이뤄졌다.

선정된 정책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식약처가 발표한 정책이 눈에 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식약처 또한 관심이 높아진 ‘마스크·손소독제·배달음식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위해 2018년에 도입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 운영한다.

이밖에도 치안과 화재진압 등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도 선정됐다.

주민이 위협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제’와 시민을 소방차에 동승시켜 안내방송을 체험하도록 하는 캠페인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17건을 포함해 2020년에 사전공시된 정책 404건에 대한 참여방법과 일정은 현재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찰, 정대협 회계 담당자 소환 조사

윤미향 해명 회견 사흘만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의혹을 조사하고 검찰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직원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정의연 이사장이자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연지 사흘 만이다.

정의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일 정대협의 회계업무 맡았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과 28일에도 정의연 회계담당자 B씨를 불러 두차례 면담 형식의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 지원 단체의 기금운영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뒤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의연의 회계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단체 기부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됐는지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에 검찰에 연이어 접수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부지검은 지난 16일 수사를 진행한 지 나흘만인 20일 정의연의 사무실과 정대협의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압색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